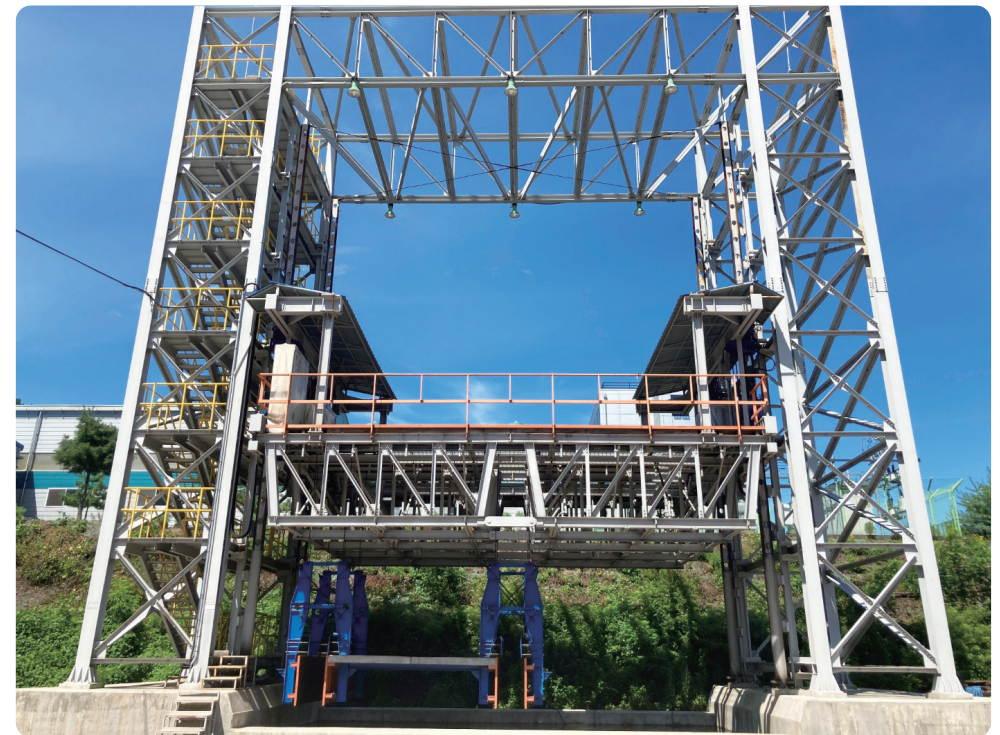


이 취재,
시작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디지털타임스

박순원 기자



우진폼테크 케이스 유압 장비 모습

2021년 여름, 한 통의 제보 메일을 받았다. 충청북도 청원의 한 중소 건설장비 회사가 대기업 건설사에게 항만건설 신기술을 탈취 당하고 있으니 이를 취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기자에게 제보 메일은 일상 속 선물이다. 하지만 모든 제보를 다 기사화 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 대개 기자에게 들어오는 제보는 사실 감정적 주장이라거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다.

하지만 내게 들어온 메일이 ‘선물’ 일

지 ‘감정적 주장’ 일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나는 제보를 받은 다음 날 곧바로 충북 청원에 있는 이 회사를 찾았다.

20미터 높이의 커다란 ‘케이스 유압 장비’

내게 제보 메일을 건넨 사람은 건설장비 회사 ‘우진폼테크’의 대표였다. 그는 내게 최소 20미터 높이는 되어 보이는 대형 크레인 장비를 소개했다. 아파트 6층 이상 높이의 구조물이었다.

해당 장비는 케이스 유압 기술 장비라고 했다. 케이스 유압 기술은 해양항만 공사에 필요한 필수 공정을 말한다. 이 기술이 없으면 건설사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 회사 '비강우데만'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라 국내 건설사들은 막대한 기술로 열타를 지불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2018년 말 우진폼테크에 해외 독점 분야를 국산화해 이익을 도모하자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개발 실패 시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성공할 경우 해양항만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제안을 수용했다. 당시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우진폼테크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현대건설이 아닌 타 건설사와 계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전속계약이었다.

우진폼테크는 연구개발 기간 3년과 20억원의 비용을 들여 케이스 유압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우진폼테크 임직원 규모가 20명이 되지 않고 자본 규모가 1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그간 케이스 유압 기술개발을 단순 시도한 것이 아니라 '올인' 해왔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건설 연구개발팀도 우진폼테크가 케이스 수직이동 유압 장비와 수평이동 유압 장비 기술개발에 성공했고 성능 검증이 완료됐다고 결론 내고 경영진에 보고했다. 이제 개발된 기술을

현대건설이 수행하는 항만 공사에 적용하기만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윈-윈(Win-Win)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전화 한 통으로 좌절된 3년간의 연구 성과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실제 항만공사 입찰에 우진폼테크 기술을 차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진폼테크의 항만공사 실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현대건설은 과거처럼 스웨덴 회사 비강우데만과 계약했다.

건설업계에서 실적 1건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실적 2건 가진 회사와 1건 가진 회사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실적이 1건인 회사와 실적이 없는 회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현대건설은 우진



현대건설 사옥 모습(현대건설 제공)



국회의사당 전경 모습(국회 제공)

폼테크에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했지만, 막상 기술개발 완료 이후에는 우진폼테크는 실적이 없으니 해당 기술을 차용할 수 없다고 했다. 우진폼테크가 기술개발에 들인 시간은 3년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전화 한 통으로 사용을 거부했다. 현대건설의 당초 목적이 케이스 유압 신기술 개발이 아니라, 해외 업체와 단가 협상을 하는 용도로 국내 중소기업을 활용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 기자, 불공정과 직면하다

당시 20대였던 기자의 시각으로 이건 너무나 불공정한 거래였다. 단순히 이 회사를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기업이 이대로 경영을 지속하도록 놔두면 산업 생태계에도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단독 기사를 보도해 부당함을 알

렸다.

현대건설은 기사에 틀린 내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스웨덴 회사와 계약했고,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했다. 자신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지만 무엇을 더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기업에게는 전화 한 통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함께한 중소기업의 3년은 아무도 살피주지 않았다. 취재에 의하면 3500억원 규모 항만공사에서 케이스 유압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억원 안팎이다. 여기서 현대건설이 우진폼테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10억원 수준이었다.

건설사에게 있어 연구개발팀은 작은 부서다. 건설사의 메인 부서는 시공 파트가 담당한다.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주무르는 시공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연구개발팀이 절약한 10억원 정도의 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건설 시공 파트는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개발한 기술 사용을 거부했다.

법조계·정치권을 함께 돌다

고교 시절 기사를 꿈꿨을 당시 기자라는 직종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처럼 보였다. 그런데 막상 기자가 되어보니 기자

가 전문가가 아니었다. 기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는 존재였다.

법조계에 이번 일을 설명하니 현대건설의 이번 행위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및 기술 탈취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진폼테크가 제작한 케이스 유압 장비는 단순한 시연 테스트 같은 것이 아니었다. 현대건설이 실제 항만공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사이즈에 맞춰 제작한 실전 모델이었다. 항만공사 실전 투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이 실전 모델까지 제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소송은 중소기업에겐 너무 어려운 길이다. 우진폼테크는 대기업과 다년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더욱이 우진폼테크가 개발한 신기술은 공동 개발자(현대건설)로부터도 채택되지 못한 미완성 기술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다른 회사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상황도 못했다. 또 현대건설은 ‘우진폼테크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현대건설이 아닌 타 건설사와 계약할 수 없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타사와의 계약에 휘방을 났다.

소송 이외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



우진폼테크 케이스 유압장비 개발현장

명과 미팅하며 현대건설과 우진폼테크 사이에서 벌어진 부당함을 알렸다.

미팅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우진폼테크가 겪은 부당함에 공감했다. 대기업이 이렇게 경영하는 것을 그대로 뒤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부당함을 바로 잡는 게 가능할 지 여부는 물음표라고 했다. 민간 회사끼리 맺은 계약을 정치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타이르겠지만,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우진폼테크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대건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나의 취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일로 운영준 현대

건설 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운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동행한다는 점을 내세워 국회 정무위원회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

열심히 취재했지만,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다. 제보자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 기자가 취재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할 수 있었고, 기자의 취재가 아니었으면 본인 혼자서는 여러 국회의원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쯤에서 기자 역할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나는 제보자에게 희망고문만 선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다지만 어떤 결론을 낼지 알 수 없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애초에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던 편이 이 회사에는 더 나은 결과였을 수 있다. 우진폼테크는 현대건설과 소송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이번 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약자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하지만 불공정 계약도 계약이기에,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나는 제보자에게 희망고문만 시킨 것이 된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취재였다. 그러나 의도만 보자면 현대건설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제안도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었을 수 있다. 그들도 처음부터 중소기업 협력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나 역시 현대건설 연구개발팀과 비슷했던 것은 아닐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란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것은 아니기에 내가 더 쓸 수 있는 기사도 없다. 또 뭔가를 더 알게 됐더라도 그것을 기사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여러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은 30대 기자가 된 나의 기자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쯤 답을 내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보다 더 연차 있는 기자가 되면 답할 수 있을까? 다만 나의 이 경험이 앞으로 내 취재에서 ‘냉소’로 이어지지는 않기를 바란다. 나는 10년 뒤에도 제보 메일 한 통에 충청북도, 아니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기자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 당신께 묻는다. 내 취재가 제보자에게 관한 희망고문만 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거라면, 이 취재,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

디지털타임스 박순원 기자